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 윤 태*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성이 체감하는 실업·빈곤의 위험, 주거불안의 위험, 금융불안의 위험, 경기침체 불안의 위험 등 경제생활 위험이 실제 출산한 자녀의 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출산한 자녀의 수가 적은 반면 출산 격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저출산, 출산 격차, 경제생활 위험 인식, 이상적인 자녀수, 실제 자녀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저출산율(Lowest-low fertility rates)의 고착화 현상¹⁾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는 오늘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1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30 이하인 국가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이스라엘(2.64)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슷하게 저출산을 경험한 이웃 나라인 일본(1.41)보다도 그 비율이 낮다(CIA, 2017).

정부에서는 출산율의 제고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채택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지난 10년(2006~2015년)에 걸쳐 시행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은 같은 기간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 증가하는 데 그쳐 획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인구대체율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현재 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더욱 감소한 1.17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²⁾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보다 먼저 대체 출산율 이하의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출산 친화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로 정의되는 ‘출산 격차’(fertility gap)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합계출산율을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자녀수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실제 출산한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Van de Kaa 2001 ; Goldstein et al. 2003). 구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은 2.1명이었다. 이는 실제 출산율 평균(1.7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많은 이들이 실제 자녀수보다 더 많은 자녀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hilipov et al., 2009). 한국에서도 최근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가임기 인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은 2.07명(여성가족부, 2015)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1) 한국사회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6.0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인구대체율 이하로 하향되었으며,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현상이 거의 20여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가오는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기술된 출산율 수치는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가운데 출산통계 자료를 참조하였음.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출산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 하였다. 예외적으로 이주영·박재완(2015)은 4차년도 재정패널 데이터(2010년)를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출산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출산간격, 가구소득,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지, 사교육비 지출액이 출산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산간격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장려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출산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을수록 출산격차가 커졌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격차의 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 출산격차를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출산격차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지목되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미래의 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 하였다. Coleman(1990)의 거시-미시 모델을 활용한 Philipov et al(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들이 미시적 수준의 출산 관련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시적 구조가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거시적 수준의 조건이 개인의 출산 계획(의도)나 실제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당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녀를 가질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미시적 수준에서의 출산의사결정의 구성은 거시적 수준의 행태 안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정성호(2009), 이상호·이상현(2010), 이진권(2011), 이보라(2017) 등의 연구는 고용의 불안정성, 주택가격의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시기를 늦추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감안하면 실업과 빈곤, 주거불안, 금융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 등 경제생활에 대한 위험 인식이 출산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 인식⁴⁾이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로 정의되는 출산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표본을 추출

4) 경제생활위험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액체근대론과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제시한 개인화 테제와 연결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100여 년 전의 개인화, 즉 공동체적 종속과 지배의 촘촘한 망으로부터 개인의 해방과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이다(Bauman, 2002). 예를 들어 근대 초기 사회에서 개인화는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의 증진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담고 있다(신경아, 2012). 반면에 후기 근대 사회에서의 개인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주어진 것'에서 하나의 '과제'로 변형시키고 개인에게 그 임무의 수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지우면서 법률상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고 있다(Bauman, 2005). 즉, 후기 근대 사회에서의 개인화는 공적 영역이 사적인 경제 영역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후기 근대성은 개인의 사회적 위상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결정되던 것을 개인의 결단에 의한 결과로 바꾸어 놓았다(김상돈·정운태, 2017). 액체근대에서 개인화를 바라보면 불확실성은 사회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한 다음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연구문제1. 한국에서 가임기 여성의 출산격차는 얼마나 높은가?

연구문제2. 가임기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경제생활 위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3. 가임기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출산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경제생활 위험 인식이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출산은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출산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관련된 요인이며, 더불어 경제규모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이희연, 2003; 배광일, 2011). 이러한 출산이 만약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학적인 가임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회과학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출산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은 시대상을 반영한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정재훈, 2017). 특히 산업혁명 이후 발전한 선진산업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출산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반대로 저발전한 발전도상국에서는 21세기에 도 여전히 높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전도상국에서 자녀가 소중한 노동력이자 사실상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되는 반면, 선진산업국가에서는 자녀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며 노령연금이 자녀에 의한 사적 부양을 대체하는 현상이 이유로 지목된다(김범수, 2017).

한국도 발전한 선진산업국가로서 출산율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한국은 오랫동안 산아제한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온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초저출산율의 지속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이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인 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외환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와 소득의 감소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다(장경섭, 2011).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초저출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일정하게 회복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오유진·박성준, 2008; 배정연·홍석자, 2010)는 소득수준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관계가 약하다는 근거가 되었다.

때문에 여성의 학력 신장,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⁵⁾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지경, 2004; 김두섭, 2007; 김현숙, 2007; 김병우, 2010; 우석진, 2010; 민현주, 2012).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무감을 덜 가지게 되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출산장려 캠페인 등 의식을 계몽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송유미·이제상, 2011).

하지만 여성의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출산의 핵심적인 당사자인 여성의 외면을 받으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가임기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실제 출산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주영·박재완, 2015).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자녀수의 절대치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현실화되었다면 초저출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배광일·김경신, 2012; 정성호, 2012). 실제로 프랑스 등 국가의 사례는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다(OECD, 2011; Thévenon, 2011).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보육정책의 확대에도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여전히 일·생활 균형의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단순한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김영미, 2018).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서구에서는 출산율의 제고가 단순한 소득수

5)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용의 여성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고용의 여성화 과정은 남성노동에 대한 여성노동력의 대체, 여성과 관련된 고용형태의 확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Sylvia Walby, 1997).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투입이 여성 지위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고용의 안정성이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정운태 외, 2012). 여성의 이직 검증을 통해 출산율을 살펴본 Winter-Edmer (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 이직이 장단기에 걸쳐서 출산율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Huttunen and Kellokumpu (2016)는 여성의 실직이 단기적으로는 출산을 낮추지만, 남성에게는 출산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배우자의 이직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 변화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다. Lindo(2010)는 1968-1995년 수입 변동에 관한 패널 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를 사용하여 남편의 이직에 대한 여성의 출산율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개별적 고정 효과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남편의 이직 직후에 자녀를 낳을 확률이 증가하고, 이직 이후 몇 년간 자녀를 낳을 확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준의 제고, 가치관의 개선과 정부 지원의 강화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와 실제 출산한 자녀의 수를 모두 반영하는 ‘출산격차’(fertility gap)의 개념을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Esping-Andersen, 2013). ‘출산 격차’(fertility gap)는 관찰된 실제 출산율과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녀수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다(Chesnais, 1999). ‘출산격차’는 출산의도와 출산행동 사이의 불일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규모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의 결과로 규정할 수 있다(Philipov et al., 2009). 출산격차의 개념은 가족규모는 순차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가족의 선호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Adsera, 2006).

유럽에서는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출산한 자녀수에 비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실제 자녀의 수보다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Goldstein et al., 2003). 출산격차의 영향을 분석한 여러 연구(Bongaarts, 2001; Fahey & Speder, 2004; Freedman et al., 1980; Kohler et al., 2002; Pampel, 2001; Adsera, 2006)들은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반영한 가족의 크기가 달성된다면,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이에 근거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의사결정 모형을 분석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거시적 조건의 불확실성이 출산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Esping-Andersen, 1999; Boca, 2002; Castles, 2003; Adsera, 2004; 2006;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4; Boca et al., 2005; Anders, 2006; Neyer and Andersson, 2008; Ann-Zofie Duvsnder et al., 2010). 현대 사회의 경제 주체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행위자(agent)로서 근로자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나 고용되었을 때 받게 될 임금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행위자로서 투자자들은 수익률과 자산 축적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로서 부모들은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Bhaumik and Nugent, 2005).

특히 경제생활의 불안은 출산격차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인구대체율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1985년과 1999년 스페인 출산 조사(SFS: Spanish Fertility Surveys)를 활용한 Adsera(2006)의 연구는 지난 20년간 경제적 상태의 악화와 실업이 여성의 이상 자녀수와 실질 자녀수 사이의 격차의 강력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Mocan, 1990; Bengtsson and Dribe, 2016)에서도 실질 소득 감소는 출산격차를 확대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Fraser(2001)는 경기침체의 가능성과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의 증가를 반영하는 소득 위험(income risk)의 개념으로 출산격차의 원인을 설명했다. 출산한 자녀는 부모에게 불가역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모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높은 소득 감소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⁶⁾

한국의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불안감의 상승이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진권, 2011). 특히 주거비용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장래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빠른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임시직 고용 비중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 이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고용불안정성의 대리변수인 임시직 비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결혼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의 경우 주택매매가격보다도 전세가격의 상승이 결혼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초혼연령이 상승했다(이상호·이상현, 2010). 다른 한편,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신윤정, 2008).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되더라도 충분한 금융자산이 축적되어있지 않거나 그 전망이 불투명할 때 사교육비와 보육비의 부담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의 연구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 자료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조사수행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5년을 제외한 매년마다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를 설문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 자료에는 경제생활 위험 인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경제생활 위험 인식이 출산 행위에

6) Fraser(2001)는 정부가 가구의 소득 위험을 분담하여 비용-효용 체계(tax-benefit system)를 조정하면 복지제도가 없었을 때 더 작은 가구규모를 선택했을 부모들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위험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일시불(lump-sum)의 급여 지급보다 지속적인 정액의 아동수당의 지급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출산의 당사자인 가임연령(18세 이상-50세 미만)의 여성을 추출했다.⁷⁾ 그 결과 모두 441명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2) 주요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출산한 자녀의 수와 자녀수 격차이다. 출산한 자녀의 수는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된다(최소값=0, 최대값=5). 자녀수 격차는 실제 출산한 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의 차이로 정의되며, 마찬가지로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된다(최소값=-2, 최대값=5).

이 논문의 독립변수인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경제생활 위험의 본인 발생 가능성 인식으로 정의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년 자료의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실업·빈곤 위험 인식, 주거불안 위험 인식, 금융불안 위험 인식과 경기침체 위험 인식으로 구성된다. 해당 인식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되는 ‘아래의 각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그 값이 작을수록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이 논문은 위의 4가지 인식을 합산하여 총합평정척도로 분석에 투입하였다(최소값=4, 최대값=28).

이 논문의 통제변수는 가치관에 해당하는 변수인 이상적인 자녀수와 교육수준,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인 소득수준과 직종, 인구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인 연령과 거주지역이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귀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족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되며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했다(최소값=0, 최대값=6).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와 전문대 이상 학력자를 구분했다. 소득수준은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여 빈곤층(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의 중위 50% 미만), 중산층(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의 중위 50%~150%), 중산층 이상(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의 중위 150% 이상)을 분석에 투입했다.⁸⁾ 직종은 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에 근거하여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한 다음 분석에 투입했다. 연령은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을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와 농촌을 구분했다. 이상의 분석틀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7) 이 논문은 기혼 여부가 아닌 가임연령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이는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만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한편 미혼모의 존재 가능성도 고려했다.

8) 이 때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의 중위 50% 값은 123.7437만원, 150% 값은 371.2311만원으로 측정되었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자녀수	연속변수(최소값=0, 최대값=5)
	자녀수 격차	연속변수(최소값=-2, 최대값=5)
독립변수	경제생활 위험 인식	연속변수(최소값=4, 최대값=28)
통제변수	이상적 자녀수	연속변수(최소값=0, 최대값=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0, 전문대 이상=1
	소득수준	빈곤층=0, 중산층=1, 중산층 이상=2
	직종	관리전문직=0, 사무서비스판매직=1, 기능조립직=2, 단순노무직=3, 실업=4, 비경제활동=5
	연령	연속변수(최소값=18, 최대값=49)
	거주지역	대도시와 인근=0, 중소도시=1, 농촌=2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기술통계에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여 독립변수인 경제생활 위험 인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다음,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제생활 위험 인식이 자녀수와 자녀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4. 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의 표본인 가임기 여성의 평균적인 자녀수는 1.180명이었다(표준편차=1.066). 그리고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격차의 평균은 1.288명이었다(표준편차=1.236). 이들 변수의 왜도는 2, 첨도는 7 미만으로 정규성에 문제는 없었다. 독립변수인 경제생활 위험 인식의 평균은 14.401(표준편차=4.280)이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은 2.470명(표준편차=.914)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126명(28.6%), 전문대 이상이 315명(71.4%)이었다. 소득수준은 빈곤층이 46명

(10.4%), 중산층이 265명(60.1%), 중산층 이상이 130명(29.5%)이었다. 직종은 관리전문직이 68명(15.1%), 사무서비스판매직이 184명(41.0%), 기능조립직이 42명(9.4%), 단순노무직이 14명(3.1%), 실업이 21명(4.7%), 비경제활동이 120명(26.7%)이었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259명(58.7%), 40대 이상이 182명(41.3%)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인근이 271명(61.5%), 중소도시가 148명(33.6%), 농촌이 22명(5.0%)이었다.

이상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실제 출산 자녀수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가임기 여성의 경제생활 위협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편으로, 실업·빈곤, 주거불안, 금융불안과 경기침체의 불안의 위협에 대한 인지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자녀수	평균=1.180, 표준편차=1.066, 왜도=.295, 첨도=-1.012
	자녀수 격차	평균=1.288, 표준편차=1.236, 왜도=.012, 첨도=-.191
독립변수	경제생활 위협 인식	평균=14.401, 표준편차=4.280, 왜도=.077, 첨도=.287
통제변수	이상적 자녀수	평균=2.470, 표준편차=.914, 왜도=.810, 첨도=1.5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126명(28.6%), 전문대 이상=315명(71.4%)
	소득수준	빈곤층=46명(10.4%), 중산층=265명(60.1%), 중산층 이상=130명(29.5%)
	직종	관리전문직=68명(15.1%), 사무서비스판매직=184명(41.0%), 기능조립직=42명(9.4%), 단순노무직=14명(3.1%), 실업=21명(4.7%), 비경제활동=120명(26.7%)
	연령	30대 이하=259명(58.7%), 40대 이상=182명(41.3%)
	거주지역	대도시와 인근=271명(61.5%), 중소도시=148명(33.6%), 농촌=22명(5.0%)

2)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실업·빈곤 위협 인식, 주거불안 위협 인식, 금융불안 위협 인식과 경기침체 위협 인식이 ‘경제생활 위협 인식’을 나타내는 하위변수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요인추출 방법으로 활용했고,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요인회전 방법으로 활용했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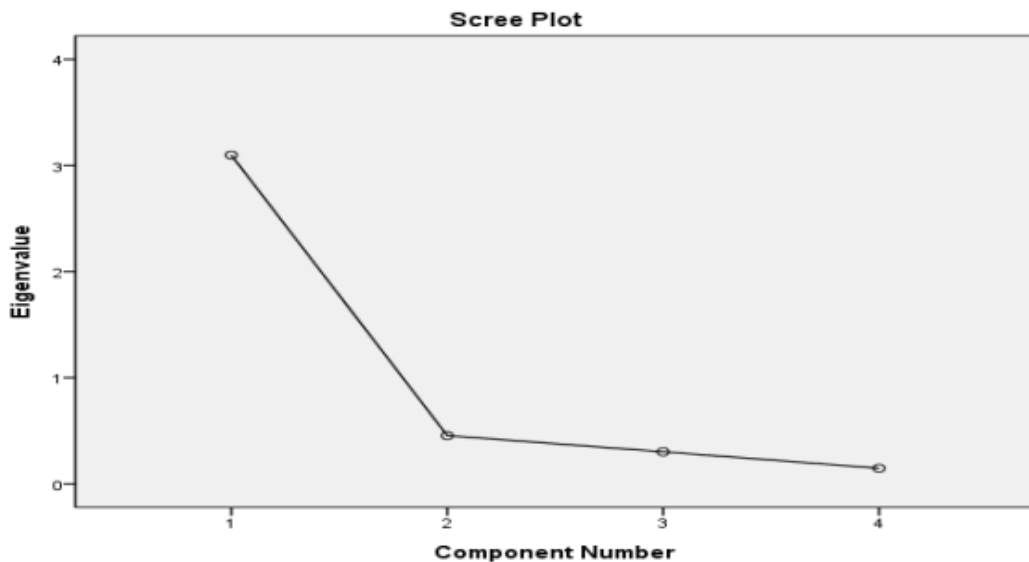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된 Kaiser-Meyer-Olkin 측도의 값은 .796으로 요인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선정은 양호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 역시 .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공통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검증되었다.

[표 3] Kaiser-Meyer-Olkin 검정과 Bartlett 검정의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79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16.469
	자유도	6
	유의확률	.000

다음으로 스크리 도표를 살펴보면, 고유값(eigenvalue)이 1.0을 넘는 요인은 1개로 그래프의 경사도도 1값 이후에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위의 4개 하위변수는 1개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분산(Total Variance Explained) 값도 77.639%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의 스크리 도표



마지막으로 요인행렬에서 확인된 변수들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80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업·빈곤 위험 인식, 주거불안 위험 인식, 금융불안 위험 인식과 경기침체 위험 인식은 ‘경제생활 위험 인식’ 개념을 나타내는 하위 요인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에서 확인된 Cronbach’s- α 값도 .901으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각의 위험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연구는 위의 네 가지 위험을 총합평정척도로 합산하여 분석에 투입했다.⁹⁾

[표 4] 주성분행렬 분석 결과 및 신뢰도

요인	변수	성분	신뢰도
		1	
경제생활 위험 인식	금융불안 위험 인식	.921	.901
	경기침체 위험 인식	.895	
	주거불안 위험 인식	.884	
	실업·빈곤 위험 인식	.817	

3)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다중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한 자녀수와 경제생활 위험 인식 및 이상적 자녀수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제생활 위험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과, 이상적인 자녀수를 높게 설정하는 이들이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수 격차와 경제생활 위험 인식 사이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이상적 자녀수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제생활 위험 인식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이상적 자녀수를 높게 설정할수록 자녀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생활 위험 인식과 이상적 자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상적 자녀수가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9) 실업·빈곤 위험 인식, 주거불안 위험 인식, 금융불안 위험 인식과 경기침체 위험 인식의 평균값은 각각 3.72, 3.53, 3.61, 3.54로 상대적으로 실업·빈곤 위험의 본인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주거불안과 경기침체 위험의 본인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강했으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1)	(2)	(3)	(4)
자녀수(1)	1			
자녀수 격차(2)	-.694**	1		
경제생활 위험 인식(3)	.151**	-.112*	1	
이상적 자녀수(4)	.228**	.543**	.025	1

4)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가임기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 인식이 출산한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모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값은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태 지수(Condition Index)는 100 미만,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8%이었다.

분석 결과,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가임기 여성의 자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p < .001$). 다시 말해 경제생활 위험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여성들이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었다. 경제생활 위험 인식의 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beta = .148$)는 연령($\beta = .444$)과 이상적 자녀수($\beta = .169$)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에서는 이상적 자녀수, 직종과 연령이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5$). 이상적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 = .169$) 자녀수가 많았고, 관리 전문직이 실업자에 비해($\beta = -.110$), 40대 이상이 30대 이하에 비해($\beta = .444$)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 자녀수)

구분	B	S.E.	β	t
상수	-.103	.284		-.361
경제생활 위험 인식	.037	.010	.148	3.636***
이상적 자녀수	.197	.047	.169	4.169***
교육수준(기준: 고등학교 이하)	-.202	.104	-.086	-1.931
소득수준 (기준: 빈곤층)				
중산층	.278	.144	.128	1.932
중산층 이상	.051	.160	.022	.316

구분		B	S.E.	β	t
직종(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198	.153	-.089	-1.298
	기능조립직	-.411	.319	-.057	-1.287
	단순노무직	-.418	.265	-.075	-1.573
	실업	-.479	.220	-.110	-2.177*
	비경제활동	-.208	.153	-.097	-1.361
연령(기준: 30대 이하)		.960	.091	.444	10.520***
거주지역(기준: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123	.094	.054	1.304
	농촌	.090	.204	.018	.442
F=15.329***, R ² =.318, Durbin-Watson=2.103, Condition Index=18.421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경제생활 위험 인식이 자녀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모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 값은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태 지수(Condition Index)는 100 미만,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9.3%이었다.

분석 결과,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자녀수 격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001). 즉, 경제생활 위험을 더 심각하게 체감하는 여성들에게서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출생 자녀수 사이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위험 인식의 자녀수 격차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beta = -.128$)는 이상적 자녀수($\beta = .594$)와 연령($\beta = -.383$) 다음으로 컸다. 통제변수 가운데 자녀수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상적 자녀수, 직종과 연령이었다(p<.05). 이상적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 = .594$) 자녀수 격차가 컸고, 관리전문직이 실업자에 비해($\beta = .095$), 30대 이하가 40대 이상에 비해($\beta = -.383$)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출산한 자녀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 자녀수 격차)

구분		B	S.E.	β	t
상수		.103	.284		.361
경제생활 위험 인식		-.037	.010	-.128	-3.636***
이상적 자녀수		.803	.047	.594	16.991***
교육수준(기준: 고등학교 이하)		.202	.104	.074	1.931
소득수준(기준: 빈곤층)	중산층	-.278	.144	-.110	-1.932
	중산층 이상	-.051	.160	-.019	-.316
직종(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198	.153	.076	1.298
	기능조립직	.411	.319	.050	1.287
	단순노무직	.418	.265	.065	1.573
	실업	.479	.220	.095	2.177*
	비경제활동	.208	.153	.083	1.361
연령(기준: 30대 이하)		-.960	.091	-.383	-10.520***
거주지역(기준: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123	.094	-.047	-1.304
	농촌	-.090	.204	-.016	-.442
		F=31.927***, R ² =.493, Durbin-Watson=2.103, Condition Index=18.421			

*p<.05, **p<.01, ***p<.001

5. 결론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가임기 여성이 체감하는 경제생활 위험 인식이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실 자녀수의 차이로 정의되는 출산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경제생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출산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표본인 가임기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의 평균은 2.470명인 반면 실제 자녀수의 평균은 1.180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서구의 출산격차 실태와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Bongaarts, 2001; Fahey & Speder, 2004; Freedman et al., 1980; Kohler et al., 2002;

Pampel, 2001; Adsera, 200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상적인 자녀수가 실제 자녀수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출산격차를 줄이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가임기 여성이 실제 출산한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생활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여성들이 통제변수의 영향을 제어한 뒤에도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생활 위험 인식의 설명력은 연령과 이상적 자녀수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기침체, 실업, 소득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ocan, 1990; Adsera, 2006; Amialchuk et al., 2014; Bengtsson and Dribe, 2016; Abramowitz et al., 2017)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가임기 여성이 체감하는 경제생활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경제생활 위험 인식은 가임기 여성의 출산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실업·빈곤의 위험, 주거불안의 위험, 금융불안의 위험과 경기침체의 위험 등 경제생활 위험을 무겁게 인식할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불확실성이 출산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Esping-Andersen, 1999; Boca, 2002; Castles, 2003; Adsera, 2004; 2006;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4; Bhaumik and Nugent, 2005; Boca et al., 2005; Anders, 2006; Neyer and Andersson, 2008; Ann-Zofie Duvsnder et al., 201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여성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높은 위험 인식이 실제 자녀출산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여성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백의 위험사회이론의 수용에서 출발한 딘(Dean, 1999)은 새로운 통치형식으로서 위험의 개인화 경향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적합한 개인으로 조율하기 위해 개인은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위험을 책임지는 주체(responsible citizens)로 변화되기를 강요받는다. 개인은 '자기 기업가(the entrepreneur of self)'로 불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neoliberal subjects)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규제와 자기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이른다(Gordon, 1991; Rose, 1999; Walkerdine, 2003). 즉, 개인화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 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인에게 전치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위험의 개인화는 자본주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만혼, 저출산과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른바 '출산 파업'이라는 형태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년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으며(Blair-Loy, 1999; Ram and Rahim, 1993), 자기 성취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선호를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보다 우선시 한다(Desai and Waite, 1991; Waite et al., 1986; Bachrach, 1987).

청년 세대가 실업과 빈곤의 위협에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회피가 위협의 개인화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장경섭, 2011). 한국에서 ‘출산과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벌어지던 과거의 계급, 계층 간의 갈등과는 다르다.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일을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인 가구의 위협이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한 집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재훈, 2017). 실제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소득이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산경향의 기저에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위협의 생산 및 분배의 논리가 부의 분배의 논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근대화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보편적이고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벡(Beck, 1988)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중산층을 포함하여 영유아 양육 부담의 발생과 가구 수입원의 감소라는 이중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복지와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개인화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로 이전된다(Cooper, 2008). 이러한 경제생활 위협에 대해 여성은 더 많은 자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협 인식이 보편화되고 고착화된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경제생활의 위협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김영란, 2014). 이로 인해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경제생활 위협 인식이 출산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있어 보육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과 투자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증명된 것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경제생활의 위협 인식을 낮추고, 위협 요인들을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할 때 비로소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출산한 자녀수의 격차가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청장년이 체감하는 실업, 빈곤, 주거와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한 출산율 제고가 요원하다는 점을 자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성효용·이은형, 2017). 저출산 대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인구 대책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제거하는 삶의 질 개선 과정에서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희망하는 자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한겨레신문 2018년 4월 10일자). 즉,

저출산 문제는 인구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의 문제로 보육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전반적인 복지의 확대를 통한 불안의 해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비로소 출산율의 반등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족구조 및 형태, 가족 가치관,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와 복지혜택의 경험 여부가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 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위험인식의 변화가 출산격차의 변화 및 실제 출산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지 못 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상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두섭(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 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범수(2017).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병우(2010). 교육, 내구재, 임금 등 출산을 저하의 요인이 여성노동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건사회연구*, 30(1), 111-141.
- 김상돈, 정윤태(2017). 정치성향과 계층귀속감,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가 경제생활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7(s), 128-156.
- 김영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김영란(2014). 한국의 사회적 위험 변화와 가족위험. *가족과 문화*, 26(2), 151-188.
- 김지경(2004).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1), 69-79.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민현주(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 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 *한국사회학*, 46(2), 61-87.
- 배광일(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논문.
- 배광일, 김경신(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3(3), 239-266.
- 배정연, 홍석자(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131-150.
- 성효용, 이은형(2017).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여성경제연구*, 14(2), 45-65.
-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신경아(2012). 서구사회 개인화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12(1), 1-33.
-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여성가족부(2015).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유진, 박성준(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연세경제연구*, 15(1), 91-112.
- 우석진(2010).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51-74.
- 이보라(2017). *정부정책신회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논문.
- 이상호, 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

- 경제연구. 445. 1-38.
- 이주영·박재완(2015). 한국의 출산격차 영향요인 실증분석 - 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4). 1-32.
- 이진권(2011).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중도절단된 포아송 회귀분석 및 중도절단된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한 자녀 수 결정모형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3). 1521-1531.
- 이희연(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범문사.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3.
- 정성호(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_____(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윤태, 김학만, 이훈희(2012).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55-79.
- 정재훈(2017). 저출산 고령사회와 그 적들. 서울: EM실천.
- 통계청 인구동향과(2017).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vw_cd=MT_ZTITLE&list_id=A21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저출산 해결하는 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9917.html#csidx131fcf437f7810581fee9db3181d6>.(2018.4.10).
- Adsera,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market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17-43.
- _____. (2006). An Economic Analysis of the Gap Between Desired and Actual Fertility: The Case of Spai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4(1). 75-95.
- Bjorklund, A.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 Popul Econ, 19. 3-24.
- Duvander, A. Z., Lappégard, T. & Andersson, G. (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45-57.
- Bachrach, C. A. (1987). Cohabitation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the U.S. Demography. 24(4). 623-637.
- Bengtsson, T & Dribe, M. (2016). Deliberate Control in a Natural Fertility Population: Southern Sweden, 1766-1864. Demography. 43(4). 727-746.
- Bhaumik, S. K. & Nugent, J. B. (2005). Wealth Accumulation, Fertility and Transfers to Elderly

- Household Heads in Peru. In Mason, A & Tapinos, G.(eds.) *Sharing the Wealth: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air-Loy, M. (1999). Career Patterns of Executive Women in Finance: An Optimal Matching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 1346-1397.
- Boca, D.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549-573.
- Boca, D. D., Pasava, S. & Pronzato. C. (2005). Fertility and employment in Italy, France and the UK. *LABOUR*. 19(Special Issue), 51-77.
- Bongaarts, J. (2001). Fertility and reproductive preferences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60-281.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2017).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27rank.html
- Chesnais, J. C. (1999). The future of French fertility: back to the past, or a new implosion?.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40-41, 212-17.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Belknap.
- Desai, S. & Waite L. J. (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Engelhardt, H., Kogel, T. & Prskawetz, A.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 109-120.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The Fertility Gap in Europe: Singularities of the Spanish Case*. Fundación La Caixa, Social Studies Collection No. 36.
- Fahey, T. & Speder, Z. (2004). *Fertility and family issues in an enlarged Europe*.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Fraser, C. D. (2001). Income Risk, the Tax-benefit System and the Demand for Children. *Economica*, 68(269), 105-126.
- Freedman, R., Freedman, D., & Thornton, A. (1980). Changes in fertility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between 1962 and 1977: Their relation to final parity. *Demography*. 17(4).

365-378.

- Goldstein, J., Lutz, W. & Testa, M. (2003). The emergence of sub-replacement family size ideals in Europ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5-6), 479-496.
- Huttunen, K. & Kellokumpu, J. (2016). The Effect of Job Displacement on Couples' Fertility Decis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2), 403-442.
- Kohler, H. P., Billari, F. C., &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599-639.
- Lindo, J. M. (2010). Are Children Really Inferior Goods? Evidence from Displacement-Driven Income Shock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2), 301-327.
- Mocan, N. H. (1990). Business cycles and fertility dynamic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2), 125-146.
- Neyer, G. (2006).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Europe: Fertility Policies at the Intersection of Gender Policies, Employment Policies and Care Policies*. Munich: MPIDR.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OECD Publishing.
- Pampel, F. C. (2001). *Institutional Context of Population Change. Patterns of fertility and Mortality across High-income N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hilipov, D., Liefbroer, A. C. & Klobas, J. E.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Berlin: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 Ram, B., A. Rahim. (1993). Enduring Effects of Women's Early Employment Experiences on Child-spacing: The Canadian Evidence. *Population Studies*, 47, 307-317.
- Sylvia, W. (1997). *Gender Transformations*. London: Routledge.
- Thévenon, O.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57-87.
- Van de Kaa, D.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s to new behavior. In Bulatao R. A. & Casterline J. B. (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Waite, L. J., Haggstrom G. W. & Kanouse D. (1986). The Effects of Parenthood on the Career Orientation and Job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Social Forces*, 65, 43-73.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omen's Economic Risk Perception on the Fertility Gap

Yun-tae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men's perception of economic risk on the fertility gap.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conomic risks such as the risk of unemployment and poverty, the risk of housing insecurity, the risk of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risk of economic downturn affects the gap between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and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For this purpos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4 dataset.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women who perceived economic risk seriously had fewer children but had a higher fertility gap. This study suggeste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Key Words: Low fertility, Fertility gap, Economic risk perception, Ideal number of children, Actual number of children

◆ 2018. 4. 17. 접수 / 2018. 6. 15. 1차수정 / 2018. 6. 21. 게재확정

* Senior Researcher, Cheongju Welfare Foundation, thisstudy@naver.com